

## 남 북 협 력 동 향

(2010. 3. 23~2010. 6. 21)

### ■ 北, 라선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해야 (3. 25, 연합)

- 북한 라선특별시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최근 라선시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제문제 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
  - ※ 환구시보(環球時報):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발행하는 국제문제 전문지
- 동 신문은 대풍그룹 시찰단이 라선시와의 상담에서 라선시를 석유화학 공업기지로 만들고 자원개발을 내세워 외자를 유치하여 기초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라선을 국가 개발 중심지로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짐.
- 또한 박철수 대풍그룹 총재는 북한의 국가 개발 및 동북아 발전 전략을 위해서 라진항을 국제항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 금강산 부동산 조사, 관계자 방북 및 예정대로 진행중 (3. 29, 연합)

-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한 가운데 3월 24일 한국관광공사 차동영 금강산지사장 등 직원 3명이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한 것을 시작으로,
  - 25일에는 김한수 현대아산 홍보부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 4명과 안교식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회장 등 투자업체 관계자 12명이 방북하였음.

- 현대아산에 따르면 28일에도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지의 현대아산 관계자의 입회하에 현대아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벌였음.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예정대로 부동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입출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특이사항은 없음.
- 29일에는 일연인베스트먼트 등 29개 업체에서 28명이 방북했음.

### ■ 北, 1~2월 중서 2억3천만달러 수입 (3. 30, 연합)

- 북한이 올해 1~2월 중국에서 물자를 수입한 액수가 작년 동기보다 30% 많은 미화 2억 3천만달러에 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
- 1월 수입액은 1억1천2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1%, 2월 수입액은 1억1천700만 달러로 28% 증가함.
-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식량난과 재화부족이 심해져 올해 들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임.

### ■ '금강산 조사' 종료··北후속조치 주목 (3. 31, 연합)

-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가 3월 31일 현지 업체 한 곳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종료되었음.
- 이에 따라 북한이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거쳐 예고한 대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강경 조치를 내 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임.
- 북한은 지난 3월 25일 우리 정부 소유 건물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우리 부동산 전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3월 18일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함.

#### ■ 北 · 中, 압록강에 수력발전소 착공 (4. 1, 연합)

- 북한과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가 3월31일 압록강에 수력발전소 2기 건설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북한과 중국은 2월28일 베이징에서 ‘조(북) · 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0차 회의를 열고 결정서를 조인하는 등 압록강 수자원 공동 이용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 특히 중국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북한과 함께 압록강에도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임.
- 2기 발전용량은 8만kW, 총 투자액은 11억 위안(약 1천800억원)이며, 완성 후에는 북한과 중국이 1기씩 관리할 예정임.

#### ■ 北, 외국인 관광객에 함흥 지역 개방 (4. 3, 연합)

- 북한이 지난 1월부터 함흥 지역을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고려여행사는 3일 홈페이지에서 “지난 1월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관광 제한 조치를 풀면서 함흥도 모든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해 함경북도 칠보산과 황해남도 해주, 평양 일부 지역 등을 새로 개방했으며 라진 · 선봉 지역도 올해 관광지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 北 인민보안성, 部로 격상… 주민통제 더 강화 (4. 6, 연합)

- 북한 인민보안성(경찰청 해당)의 조직 명칭이 ‘인민보안부’로 격상된 것으로 확인됨.
- 북한의 조선중앙TV는 5일 평양시의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보안부 건설여단’의 일원인 림성철씨 인터뷰를 다뤘고, 림씨도 자신의 소속을 ‘인민보안부’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인민보안부는 인민무력부(국방부 해당),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 해당)와 나란히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직할 조직으로 재편됨.
- 대북 전문가는 “인민보안부의 최근 활동을 지켜보면 1990년대 중반 선군정치 초기에 인민군을 앞세웠던 것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듯하다”면서,
- “화폐개혁 실패 이후 경제난과 식량난이 악화되자 인민보안부를 동원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함.

## ■ 글로벌스틸홀딩스 회장, 北무산광산 지분인수 협의 (4. 6, 연합)

- 인도의 세계적 철강회사 글로벌스틸홀딩스가 북한의 무산 철광석 광산의 지분 확보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이 6일 보도
- 신문은 “프라모드 미탈 글로벌스틸홀딩스 회장이 북한을 방문, 고위 당국자들과 무산광산 지분확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 “채광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해 무산광산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미국 평화연구소의 책임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 모두 경제개발을 위해 철광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 “북한이 광산개발 과정에 경쟁을 도입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이익을 늘리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함.

#### ■ 北김정일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불참 (4. 9, 연합)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2차 회의에 불참하였음.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최고인민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참석자 명단을 호명함.
- 또한 통일부에 따르면 3남 김정은과 관련한 후계 세습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이날 헌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개정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작년 대비 6.3% 늘어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킴.

#### ■ 北, 러시아제 최신 해상공격무기 도입 추진 (4. 9, 문화)

- 북한이 최근 수년간 러시아와 이란의 어뢰 등 신형 해상공격무기 도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짐.
- 군 정보 관계자는 9일 “북한이 1·2차 서해 연평해전 이후 러시아의 해상무기전시회에 참석하고 무기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말함.
-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 및 이란이 보유한 스텔스 어뢰와 중국산 신형 자항기뢰 등을 도입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짐.

#### ■ 北, 외무성 부상에 前주중 공사 전격 발탁 (4. 11, 연합)

- 북한 김성기 전(前) 주중 공사가 최근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승진한 김영일 전 부상(차관급)의 후임으로 외무성 부상에 전격 발탁됨.
- 김성기 부상은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중국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취임을 기념하기 개최한 리셉션에 외무성 부상 자격으로 참석함.
- 지난 3월 중국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김 부상은 김영일 부장의 뒤를 이어 외무성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부상에 임명된 것으로 보임.

## ■ 北, 금강산지구 남측 자산 동결·인원추방 (4. 9~12, 연합)

- 북한은 8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자산 동결, 부동산 조사에 불응한 남측 업체의 사업권 박탈, 금강산관광 사업자변경, 개성공단사업 재검토 등 4개항의 강경 조치를 발표함.
-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힘.
- 성명은 이어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모독하고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갈 경우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북한이 13일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의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동결을 집행하겠다고며 우리측 당국자가 현장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
-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12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부동산 동결 집행에 입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함.
- 관광공사는 앞서 11일 금강산 자산 동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앞으로 발송하였음.
- 또한 현대아산 측은 “일단 우리와 사업을 단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임.

## ■ 클린턴, ‘北 핵보유’ 기정사실화 (4. 12,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클린턴 장관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획득하는 것"이라면서,
- 특히 북한을 "이미 핵무기들을 갖고" 있는 나라로 분류한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차별화하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함.

#### ■ 北 김영남, “인민생활 향상 총공세 벌여야” (4. 14, 연합)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4일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4.15)을 맞아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국가적인 총공세를 벌여야 한다”고 밝힘.
- 김 상임위원장은 이어 “당의 경공업혁명 방침과 농업혁명 방침을 관철해 질 좋은 인민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키며, 인민생활과 관련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고 주문함.
- 이는 민생 안정을 통해 민심을 잡으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로 풀이됨.
- 또한 대외 관계와 관련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 北, 군 장성 100명 승진인사. 97년 이후 최대 (4. 14, 연합)

- 북한이 고 김일성 생일(4.15)을 하루 앞두고 대장 4명을 포함해 군 장성 100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함.
- 승진 대상자 중, 대장 승진자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겸 국방위원, 리병철 공군사령관, 정명도 해군사령관, 정호균 전 포병사령관 4명이었는데,
- 우동측은 작년 4월 군 장성 인사 때 상장으로 승진한 후 다시 1년만에 대장에 올라 '김정일 체제'의 실세임이 드러남.

- 이번 장성 승진은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기 한해 전인 1997년(129명 승진) 이후 최대 규모로, 김 위원장의 군부 장악과 군 사기 진작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됨.

#### ■ 北쌀값, 이달 중순 들어 반등세 (4. 15, 데일리NK, NK지식연대)

- 작년 11월 말 화폐개혁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탄 후, 3월 말 200원(이하 kg당)까지 폭락했던 북한의 쌀값이 4월 중순 들어 다시 400~500원으로 반등한 것으로 전해짐.
- 쌀값은 이달 1일 평양 200원, 신의주 200원, 혜산 250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5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7일에는 평양 450원, 신의주 450원, 혜산 500원까지 뛰었음.
- 김일성 생일(4.15)을 맞아 4월 상순 배급이 재개되고 식량 공급 정상화 소문이 나돌면서 쌀값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난 9일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음.

#### ■ 北방송, 中관광단 일정 상세히 전해 (4. 16, 연합)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의 금강산 자산 동결 직후 방북해 주목받았던 중국 단체관광단이 평양 일원과 판문점을 둘러봤다고 전함.
- 중국 관광단의 이번 북한 방문은 작년 10월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양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뤄진 것임.
- 총 395명으로 구성된 중국 측 참관단과 관광단은 지난 12~13일 항공편과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 중국의 친선 참관단과 관광방문단이 평양의 만경대(김일성 생가), 김일성화(花)축전장, 개선문, 당창건기념탑, 서해갑문, 판문점 등을 방문함.

#### ■ 北, 8개도시 인프라 개발 계획 착수 (4. 16, 연합)

- 북한 대풍그룹 박철수 총재는 16일 북한이 평양과 남포, 라선, 원산 등 8개 도시에 5년간 1천200억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개발하는 계획을 올해 착수했다고 밝힘.



- 박 총재는 이 개발 프로젝트가 경제 재건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히면서,
- “이 계획이 북한과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 설립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이번 개발 계획이 적용되는 도시는 평양, 남포, 함흥, 원산, 김책, 청진, 신의주, 라선 등 8개 도시임.

#### ■ 北, 천안함 북한 관련설은 날조라는 입장 표명 (4. 17, 연합)

- 북한이 17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며 북한이 관련됐다는 주장은 ‘날조’라는 공식 입장을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군사논평원이 이날 발표한 글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불상사를 우리와 연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번 군사논평원의 글은 지난달 26일 천안함이 침몰한 뒤 22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반응임.
- 그러나 군사논평원은 ‘북 관련설’이 날조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는 않았음.

#### ■ 北신문, ‘그랜드 바겐’ 비난 (4. 17, 연합)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노동신문이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인 ‘그랜드 바겐’을 비난하였다고 전함.
- ※ 그랜드 바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대북지원을 본격화하는 내용의 일괄타결방안
- 신문은 17일 ‘남조선 당국의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평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궤변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미국이 수 만개의 전략·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상황에서 공화국이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갖춘 것은 당연하다”며,
-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조미 사이에 신뢰가 조성돼 쌍방 관계가 정상화 되면 핵문제 해결에도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함.

#### ■ 北, “핵보유국으로 핵군축 노력에 참여할 것” (4. 21, 연합)

- 북한은 21일 핵보유국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비망록을 통하여 “우리는 핵무기를 필요 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 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함.
-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핵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 이와 관련,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21일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고 말함.

#### ■ 北나선시-몽골, 경제무역협조 양해문 체결 (4. 21, 연합)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북한의 나선시와 몽골의 도로·운수·건설 및 도시경영부 사이의 ‘경제무역협조발전에 관한 양해문’이 나선시에서 체결됐다고 전함.
- 북한은 올해 남한과 중국, 러시아 등 외부로부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는 등 외자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 이번 체결로 몽골 정부가 나선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 北군부, 개성공단 실태조사 종료 (4. 21, 연합)

- 통일부는 북한이 20일 이틀간의 개성공단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조사단 일행이 오늘 오후 ‘실태 파악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한 뒤 개성 공단을 떠났다”며, “이번 조사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북측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취할 후속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 中훈춘-北나선-러 잇는 ‘3국 관광’ 추진 (4. 23, 연합)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북한의 나선, 러시아 극동을 잇는 ‘3국 관광’ 노선이 빠르면 다음 달 신설될 예정임.
- 훈춘시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훈춘에서 출발, 러시아 슬라반카와 하산, 북한의 두만강시와 라선시를 잇는 관광 루트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 훈춘시는 이들 3국 여행사가 최근 이 관광 루트를 공동 답사하며 통관 절차와 관광 일정, 노선 등을 점검했으며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모든 점검을 끝냈다고 밝힘.
- 훈춘시 여유국(여행관리국)은 다음 달 ‘5.1절’ 연휴를 전후해 관광단을 모집, 이 노선 관광을 시작할 계획임.

#### ■ 北, 금강산지구 5개 동결자산 몰수 (4. 23~26, 연합)

-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하 명승지지도국)이 앞서 동결했던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힘.
-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명승지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고 말함.

- 담화는 이어 “날이 갈수록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민간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을 오는 30일까지 집행하겠다고 24일 현대아산에 통보하였으며,
- “동결대상 부동산 소유자 및 대리인들은 27일 오전 9시까지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서 조치 실행에 입회하라”고 요구함.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사업자간 합의와 당국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관련조치를 지켜본 뒤 30일 이후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임.
- 한편, 금강산 30개 업체 관계자들은 27일 북한의 부동산 동결 조치에 입회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임.

#### ■ MB, “남북정상회담 안해도 좋다” (4. 24, 연합뉴스)

- 이명박(MB) 대통령은 23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나는 임기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한 번도 안 만나도 좋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직·간접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사 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밝힘.
- 이어 “그러나 나는 만남을 위한 만남, 정치적 의도를 깔고 하는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함.

#### ■ ‘황장엽 살해지령’ 北직파간첩 2명 구속 (4. 24, 연합뉴스)

-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납파된 간첩 2명, 김모(36)씨와 동모(36)씨가 구속됨.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2월 중국 엔지를 거쳐 탈북자로 가장해 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음.

※ 정찰총국: 북한에서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해오던 노동당의 '35호실' 및 작전부와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이 지난해 인민무력부 산하로 통합·확대 개편된 기구

- 이들은 “황씨의 동향을 먼저 파악해 보고한 뒤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지시받아 실행하기로 돼 있었다”고 진술함.
- 수사팀 관계자는 “정찰총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북한 군당국이 대남 테러행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함.
-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언론매체를 통해 2008년 적발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언급하며 “완전한 날조극”이라고 주장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4월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금강산 온천장 주변부터 시작해서 금강빌리지, 구룡빌리지, 온정각 동·서관을 각각 동결한 뒤 오후 3시부터 해금강 호텔 등을 동결했다”고 전함.
- 한편, 현대아산 등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시설관리를 해온 중국인(조선족) 근로자 36명이 2일 오후 3시30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했다고 전함.
- 또한, 현대아산 등의 한국인 직원 24명은 3일 오전 9시40분께 귀환하였으며,
- 이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이후에는 현대아산 및 골프장 사업자인 에머슨퍼시픽 소속의 한국인 직원 14명과 현대아산의 중국인 직원 2명 등 16명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게 됨.

#### ■ 北, 개인부동산임차 허용. 부동산관리법 제정 (4. 28, 연합)

- 북한이 작년 11월11일 총 6장47조의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해 부동산의 매매와 용도 변경, 무단임대를 금지하고, 부동산 사용료의 국가 납부를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짐.
- 1996년 제정된 ‘사회주의재산관리법’에는 부동산의 이용자 범위가 기관, 기업소, 단체로 국한돼 있지만 ‘부동산관리법’은 공민(개인)을 추가함.
- 북한에서 개인·단체 간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국가의 주택공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동산 암거래 시장이 차츰 커진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북한은 2006년 4월 열린 '제11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에서 당해 연도 예산안에 '부동산사용료'라는 재정수입 항목을 신설한 바 있음.
- 북한은 작년 11월 말 화폐개혁을 전후해 부동산관리법 외에 양정법, 농업법, 물자소비기준법 등 모두 11개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통제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 3월 남북교역 2억弗…작년보다 89%↑ (4. 28, 연합)

- 3월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월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 규모는 2억40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1억824만 달러)보다 88.5% 증가하였음.
- 지난달 남북교역에서 반출건수는 4천586건, 반출금액은 8천436만 달러였고 반입건수는 4천85건, 반출금액은 1억1천967만 달러였으며,
- 교역수지는 3천531만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는 2008년 10월(3천539만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컸음.
-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는 지난해에 이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교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 北남흥화화학기업소, 석탄 이용해 비료생산 (4. 29, 연합)

- 북한 평안남도에 위치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무연탄을 이용한 비료생산을 시작함.
- 조선중앙통신은 4월 29일 김영일 내각 총리,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갖고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을 본격 가동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어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안아올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렸다"고 평가함.

- 일반적으로 비료는 원유에서 나온 나프타로 만드는데, 북한은 달러 부족으로 원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비료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됨.

## ■ 北김영남, 엑스포 참석차 상하이 도착 (4. 29 ~ 30, 연합)

- 4월 29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10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상하이에 도착함.
-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4월 30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을 만나 "(북·중) 쌍방 사이의 친선 내왕과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한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난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두 나라는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조선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 北, 금강산 주요 시설 동결·인원철수 완료 (4. 29 ~ 5. 3, 연합)

- 북한은 4월 29일 현대아산이 소유한 금강산의 주요 관광 시설에 대해 동결 조치를 집행하였으며,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 및 관리 인력 추방 결정에 따라 5월 2일~3일 현지 관리 인원이 철수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4월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금강산 온천장 주변부터 시작해서 금강빌리지, 구룡빌리지, 온정각 동·서관을 각각 동결한 뒤 오후 3시부터 해금강 호텔 등을 동결했다"고 전함.
- 한편, 현대아산 등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시설관리를 해온 중국인(조선족) 근로자 36명이 2일 오후 3시30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했다고 전함.
- 또한, 현대아산 등의 한국인 직원 24명은 3일 오전 9시40분께 귀환하였으며,
- 이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이후에는 현대아산 및 골프장 사업자인 에머슨퍼시픽 소속의 한국인 직원 14명과 현대아산의 중국인 직원 2명 등 16명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남게 됨.

## ■ 北 김정일, 중국 방문說 (5. 3, 연합)

- 3일 오전 5시 경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단둥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 후 다섯 번째 방문임.
-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다음과 같이 관측되고 있음.
-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설명 및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협조 요청
- 북중간 긴밀하게 논의 되어 온 6자 회담 복귀의 공식 천명
- 작년 11월말 화폐개혁 이후 악화된 경제 회복을 위한 중국의 지원 요청
-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차기 지도부에 대한 중국의 지지 요청 등.

## ■ 北, 6월부터 라선 관광 개방 (5. 5, 데일리 NK)

- 중국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가 “6월 나진·선봉 지역이 최초로 관광지로 개방된다”며,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온 20명의 관광객이 오는 6월 30일 첫 여행길에 오른다”고 밝힘.

## ■ 北무역은행, 채무 변제 못해 美법원에 피소 (5. 5, 연합)

- 북한의 대표적인 대외거래 결제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이 대만의 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뉴욕 법원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짐.
- 조선무역은행은 2001년 8월 25일 대만의 메가인터네셔널커머셜뱅크 (MICB)로부터 500만 달러를 차용한 후 추가 상환을 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MICB는 남은 원금 470만 달러와 상환기간일까지의 이자 및 그 이후의 연체 이자 178만4천300여 달러 등 총 65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함.



## ■ 北 김정일, 방중 마치고 귀국 (5. 7, 연합)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 등 4박5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7일 귀국 하였으며, 방중 기간 동안 북·중 경제협력 강화와 6자 회담 재개에 대해 논의함.
- 5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① 고위층 교류 지속, ② 전략적 소통의 강화, ③ 경제무역 협력 심화, ④ 문화, 교육 등 인문교류 확대, ⑤ 국제 및 지역 문제 협력 강화 등 5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를 환영하고 양국간 실무협력 수준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또한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방중 첫날인 3일부터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 물류 항구도시인 다롄과 텐진을 방문하여, 항만 시설과 인근 물류 산업기지를 시찰함.
  - 이는 김 위원장이 나진항 개발 등 북·중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 6일에도 원자바오 총리와 별도 회동하여 양국 중점 협력 프로젝트와 변경지역 인프라 건설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
  - 이번 방중에는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등 당·군·정의 핵심 실세들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과 경제협력을 하는 북한의 평안북도,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 中, 천안함과 김정일 방중은 별개 (5. 8, 연합)

- 중국 외교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천안함 침몰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3~7일 김 위원장의 방중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비공식 방문으로, 그 방문과 천안함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다”면서,

- “천안함 사건을 다룰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의 관심사로 다뤄야 한다”고 말함.
-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이 6자회담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천안함의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힘.

## ■ 개성공단 부동산 집행기구 준칙 마련 (5. 9, 연합)

-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의 부동산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힘.
- 이 준칙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산 집행관과 감정인을 위촉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
-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부동산 경매, 채무변제 등을 의뢰했을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함.

## ■ 中 지린성 창바이현, 北 변경 관광 개시 (5. 9, 연합)

- 길림 신문은 1일부터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현이 북한 변경 관광을 위한 통행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바이산시나 창바이현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창바이 통상구를 통해 북한 변경 관광에 나설 수 있게 됨.
- 중국은 북한을 관광하는 자국민들 사이에 도박이 성행하자 2005년 북한 변경 관광을 전면 중단시켰다가 지난해 4월 단둥(丹東), 투먼(圖們)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다시 허용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변 지역 변경 관광과 북한 내륙 단체 관광을 전면 재개한 바 있음.

## ■ 中, 훈춘-라진-상하이 해상항로 개설 (5. 12, 연합)

- 중국 정부가 최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 - 북한 라진항 - 상하이를 잇는 석탄수송 해상 항로의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 이 항로는 지난 3월 착공한 훈춘-북한 원정리 간 두만강 다리 보수 공사가 완공되는 오는 7월 개통될 예정임.
- 중국은 올해 시범적으로 훈춘에서 생산되는 10만t의 석탄을 이 항로를 이용, 상하이와 이가오차오(外高橋) 부두를 통해 남방에 공급할 계획임.
- 북한은 2008년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에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부여한 데 이어 지난해 라진항을 국제물류기지로 합작개발기로 중국과 합의한 바 있음.

### ■ 北, 17일부터 평양에서 새 공민증 발급 (5. 12, 데일리NK)

- 북한은 평양에서 17일부터 새 공민증 발급을 시작하였으며, 지방에서도 5월 안에 새 공민증이 교부될 것으로 전해짐.
- ※ 공민증: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공민증은 만 17세 이상 주민들이 휴대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에 발급되는 새 공민증은 플라스틱 재질에 사진과 이름, 주소, 공민증 번호 등이 인쇄된 것으로 알려짐.
- 평양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평양시 인민반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새로운 공민증 발급 사실을 알리고 세대원의 거주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음.
- 이번 공민증 교체는 탈북자 가족 등에 대한 감시와 북한 사회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 북한주민이탈센터 고양·평택 추가 개소. 총 6곳 (5. 12, 연합뉴스)

- 경기도(경기도2청)는 14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고양과 평택 2곳에 문을 연다고 밝힘.
- 북한주민이탈센터는 취업 지원과 생활 상담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돕는 기관으로서 고양 센터는 서북부권(김포·고양·파주) 지역을, 평택 센터는 남부권(화성·오산·평택·안성) 지역을 맡게 됨.

- 이로써 도(道)내 북한주민이탈센터는 부천(서부권역), 포천(북부권역), 성남(동부권역), 시흥(중부권역) 센터를 포함해 모두 6곳으로 운영 됨.

## ■ 北신문, 자체 기술로 핵융합 성공 주장 (5. 12~13, 연합)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북한이 자체 기술로 ‘수소폭탄’ 개발에 필수적인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1면 기사에서 “조선(북한)의 과학자들이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100% 자체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며,
-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 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 반응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끝났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중국 관영언론은 북한의 핵게임 중단을 촉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임.
-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전문지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영문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의 핵융합 기술은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소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 “북한은 핵보유로 가는 길목에서 세계 대국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편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융합 주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 北, 김일철 국방위원 ‘모든 직무’ 해임 (5. 14, 연합)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호에 따라 김일철이 연령상 관계(80살)로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1부부장의 직무에서 해임되었다”고 전함.

- 김일철은 해군 출신으로 인민무력부장에까지 올라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군부 트로이카를 형성했으며,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남한을 방문하면서 널리 알려진 바 있음.
- 북한 당국이 군부 핵심 인사를 연령상의 이유로 해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임에 따라, 김일철의 해임이 내부 권력분쟁, 천안함 사건 희생양, 김정은 후계구축을 위한 인사 등의 관측이 제기됨.

### ■ 北군부, 뺄라 지속 땀 육로통행 차단 (5. 16, 연합)

-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16일 남측의 대북전단(뺄라)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측 단장은 “우리 군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는 이상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전단살포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힘.

### ■ 中, 북핵 관련 6자회담 3단계 중재안 제시 (5. 16, 연합)

- 중국이 15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6자회담 공식 재개에 앞서 예비회담 개최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3단계 프로세스는 ‘북한과 미국간의 양자대화 → 6자회담 참가국들간의 예비회담 → 6자회담 본회담 재개’의 수순이며, 북·미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 측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임.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먼저 해결된 이후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며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기조를 재차 밝힘.
- 일본 측도 “만일 북한의 관여가 명백해 진다면 6자회담에 있어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을 열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 ■ 정부, 남북교역 및 대북사업 보류 요청 (5. 17, 연합뉴스)

- 정부가 남부교역 업체들과 정부 유관 부처들에게 남북교역 및 대북사업의 진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가 11~12일 남북교역 업체들에게 신규 투자 및 계약 체결·선불·지급·물품 반출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바, “남북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탁가 공업체를 포함한 남북 경협업체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또한 17일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지난 주 산림청과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정부 부처에 대북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정부는 오늘 20일께로 예정된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조사결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본 뒤 다양한 대북조치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 정부,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 (5. 20, 연합뉴스)

- 민군합동조사단은 20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백령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라고 결론 내리고, 핵심 증거물들을 공개함.
- 조사단은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서해 공해상을 크게 우회해 백령도 서쪽으로 침투, 천안함 근접거리에서 음향추적 어뢰를 발사하였다고 밝히고,
- 천안함 침몰 해저에서 인양한 어뢰 추진기 파편, 화약 성분 검출, 선체변형 형태 등을 증거로 제시함.
- 발표 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반면, 중국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밝힘.
- 미국 백악관은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국제조사단에 의해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강력히 알려준다”고 밝힘.

-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도 긴급 관계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한국,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마자오췌(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조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각 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며,
-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함.

### ■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사태 담화문 발표 (5. 24,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천안함 침몰 사태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들을 발표함.
-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음.
-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임.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감.
- 향후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임.
- 천안함 사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함.
-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인 기본 책무임.

### ■ 정부,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조치 발표 (5. 24, 연합뉴스)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4일 외교·통일·국방 장관이 참석한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일단 유지기로 하였지만,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는 개성공단 지역을 포함하여 전면 금지되며, 개성공단 체류 인원도 축소한다고 밝힘.

-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측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한편,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및 영유아 등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힘.
- 현 장관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북한 선박 운항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유지 되지만,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힘.
- 국방부는 24일 오후부터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며,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오는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 참가,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함.
-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설득 외교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와 1718호의 엄격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힘.

## ■ 북한, 작년 대외교역 10.5% 감소 (5. 24, KOTRA)

- 2009년 북한의 대외교역(남북교역은 제외) 규모는 34.1억 달러로 91년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던 2008년에 비해 10.5% 감소하였으며, 12.9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임.
- 2009년 북한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78.5%로, '06년 56.7%, '07년 67.1%, '08년 73%로 등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남북 제외)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수출입계		무역수지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액
2007	918	-3.0	2,022	-1.3	2,941	-1.8	-1,104
2008	1,130	23.0	2,686	32.7	3,816	29.7	-1,556
2009	1,063	-6.0	2,351	-12.4	3,414	-10.5	-1,288

북한의 5대 무역대상국 (09년 기준)

국가명	중국	독일	러시아	인도	싱가폴
교역 비중	78.5%	2.1%	1.8%	1.8%	1.7%

자료: KOTRA

■ ‘北=주적’ 개념 6년 만에 부활 확정 (5. 25,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2004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키로 확정하고,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재표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北, 南대북조치에 ‘남북관계 단절’ 대응 (5. 26, 조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한다”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말함.
- 이어 “관문점 적십자연락대표의 사업을 완전 중지한다”면서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우리측 영해·영공통과를 전면금지한다”고 말함.
- 이 같은 북측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우리 측 인원 8명이 26일 오후 1시45분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함.

## ■ 中, 금강산 외금강 관광 강행 (5. 28, 서울)

- 한국 정부의 북한 관광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행사들이 이달 중순부터 금강산 단체 관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는 27일 “5월 중순부터 몇몇 여행사에서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금강산 단체관광을 시작했다.”고 밝힘.

## ■ 백악관 “美·日 천안함 사태 안보리 회부 지지” (5. 28, 연합)

- 백악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27일 오후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침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 ■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마무리 단계 (5. 28, 연합)

- 통일부는 24일 우리 국민의 개성공단 체류인력 규모를 평일 기준 900~1천명에서 50~60% 선으로 줄이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지원단)은 입주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는 직원 수를 기존의 약 50% 수준에서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해서 27일 전원 복귀할 것을 주문함.

## ■ 北 국방위, “130톤 연어급 잠수정 보유 안해” (5. 29, 연합)

- 조선중앙TV와 평양방송은 28일 북한 국방위원회 박립수 정책국장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톤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 박 국장은 또한 우리 국방부가 제시한 북한 어뢰 관련 소책자에 대해 “우리는 어뢰를 수 출하면서 그런 소책자를 준 게 없다”고 주장하고,
- “우리는 무장장비에 번호를 매길 때 기계로 새긴다”며, “북에서는 광명성 1호 등 ‘호’라는 표현을 쓰지 ‘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남측 근거들을 반박함.

- 북한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수년전 특정 중동 국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했고, 130톤급 잠수정이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함.
- 또한 탈북자 및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확인 결과 북한은 ‘호’와 ‘번’ 모두를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북한의 무역회사에서 작성해 제 3국에 제공한 어뢰설계도가 포함된 무기 소책자를 확보되어있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장들에 대해 다시 반박함.

## ■ 軍, 대북 심리전 전단 살포 당분간 보류 (5. 30, 연합)

- 군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실시되는 전단 살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함.
-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당초 기상 여건 때문에 전단 살포를 연기해왔는데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 전단 살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금주 중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자극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에 군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며,
-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체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 심리전 자제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 원자바오, 천안함 긴장 해소, 충돌 피해야 (5. 30, 연합)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30일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가진 3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밝힘.
- 원 총리는 “우리는 반드시 3개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입각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서로 배려를 해주며,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며,
- “우리는 반드시 모든 노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 전제조건이 없으면 발전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함.

## ■ 北, 개성공단 개발 계속, 등록설비 반출 불허 (5. 31, 연합)

- 북한은 30일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 관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전함.
-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고 ①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②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③ 임대 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④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⑤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함.
- 북측은 특히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함.

## ■ 개성공단기업協, 체류인원 제한 해제 요청 (6. 3, 연합)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3일 우리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 해줄 것을 요구함.
- 배해동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3일 임시총회 개최사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남북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만큼 안정적인 사업 활동의 보장을 원한다”며, “체류인원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등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힘.
- 배 회장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남북 정부의 위협적인 발언이 오가면서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등 4천300여개사와 근로자 2만3천명, 부양가족 10만여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 “개성공단 근로자 및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발언 등 어떠한 행위도 중단할 것을 남북 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임.

## ■ 개성공단 주문 감소로 일부업체 휴업 (6. 3, 매경)

- 개성공단 업체 중 한 곳이 조업 차질을 우려한 거래처의 주문 감소로 이달에는 부분 휴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짐.
- 통일부 당국자는 “한 입주기업이 최근 북측 근로자 850여 명 중 500여 명을 쉬도록 조치한 것으로 안다”며 “일감이 줄어 간식비나 식대 등 인건비가 부담됐을 것”이라고 전함.
- 입주기업들은 휴직 근로자에게도 정상 급여의 60%를 지급해야 하지만, 일감이 없는 상황이라 부분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 ※ 현재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은 월 평균 70달러 정도 임금을 받지만 잔업수당, 특근비, 식비, 출퇴근비 등을 모두 합산하면 110~140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60%는 섬유·봉제업체와 단순 임가공 업체로, 전적으로 바이어 주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 中 훈춘-北원정리 두만강 대교 개통 (6. 3, 연합뉴스)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 대교 보수 공사가 완료돼 1일 개통됐다고 연변일보가 3일 보도함.
- 이 다리는 훈춘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통하는 다리로, 이번 개통으로 중국의 라진항을 통한 동해 해상 항로 운송도 곧 시작될 예정임.
- 이에 따라 훈춘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비롯해 동북 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연간 100만t가량 남방으로 운송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해를 통한 해상 진출을 모색해왔으며, 2008년 다렌의 창리(創立)가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1호 정박지 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임.

## ■ 北유전개발 “꽃기업” 1년내 탐사 시작 (6. 3, 연합뉴스)

- 최근 북한 업체와 유전개발 합작사를 설립한 영국 아미넥스는 1년 내에 유전탐사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3일 밝힘.

- 영국계 아일랜드 유전개발회사인 아미넥스의 브라이언 홀 회장은 이날 “앞으로 1년 안에 동해에서 탐사활동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홀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간 함께 일해 왔으며,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도 수개월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고 강조함.
- 아미넥스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북한 조선에너지와의 합작사인 ‘코렉스(KOREX)’와 동해상 5만681km<sup>2</sup> 해역에서의 공동 유전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주 밝힌 바 있음.
-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선에너지는 120만 달러의 납입 자본을 신고한 투자지주사로 알려짐.

## ■ 日 “천안함 사태 한국지지 불변” (6. 3, 연합)

-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일본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3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국내 정계 변화가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힘.
- 나카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이미 북한에 대한 자체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그는 이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어제 하토야마 총리는 납치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고 전함.
- 이날 회견에 함께 참석한 안도 다카하루(安藤隆春) 경찰청 장관도 “각 지방경찰청에 북한과 제3국간 수출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힘.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대북 송금시 보고 의무 기준을 종전 ‘1천만엔 이상’에서 ‘300만엔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한 바 있음.

- 또 일본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음.

## ■ 정부, ‘천안함’ 유엔 안보리 공식 회부(6. 4, 연합)

- 외교통상부는 4일 오전 11시(뉴욕 현지시간) 주(駐)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멕시코)에 제출했다고 밝힘.
- 정부는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함.
-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가 1953년 유엔군이 당사자로 참여한 정전협정 2조12.15항과 유엔헌장 7장을 위배한 것으로 규정함.
- 유엔 안보리 의장은 조만간 이사국들에게 서한을 회람하고 협의절차를 거쳐 천안함 사건의 의제 채택과 추후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안보리 대응수위와 관련,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는 대북 제재결의안 보다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를 규탄(condemn)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urge, call upon)하는 내용의 일반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적인 설득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로 대응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 한미 해군 연합훈련 연기 (6. 4, 조선)

- 8일부터 나흘 동안 서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 해군 연합훈련이 연기됨.
-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4일 “내주 초 열릴 계획이던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이 미국 측 준비사정을 감안해 2~3주 연기돼 6월 중순 이후 실시되고, 대잠수함 훈련은 이달 말 또는 7월 초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군은 훈련 연기 사유를 '연합훈련의 효과 극대화'로 설명하고 있지만, 군 일각에서는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중국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이와 관련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회의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000t급)를 연합훈련에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 측과 대잠수함 훈련을 강화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중이라고 말함.

## ■ 최고인민회의 개최 결과 (6. 8, 연합)

-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를 열어 장성택 국방위원회 위원(노동당 행정부장 겸직)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새 내각 총리에 최영림을 임명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내각 부총리였던 곽범기, 오수용, 박명선 3명이 해임되고, 강능수 노동당 부장과 김락희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 리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전하철 당 중앙위 위원 4명이 새로 부총리에 임명됨.
- 또 조병주 기계공업상과 한광복 전자공업상에게 내각 부총리를 겸임토록 해, 북한의 내각 부총리는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으며, 종전의 내각 부총리 5명 가운데 로두철, 박수길 2명은 유임됨.
- 장성택의 부위원장 승진으로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의 부위원장은 종전의 리용무 차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부위원장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음.
- 이 밖에 안정수가 경공업상에,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성 국장이 식료일용공업상에, 박명철 국방위 참사가 체육상에 임명되고, 전임인 리주오 경공업상과 정연과 식료일용공업상,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은 해임됨.
- 관심을 모았던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공직 임명,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남 조치,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 후속 입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中 지린성 “北 자원개발, 교역 확대 추진” (6. 8, 연합)

- 중국의 지린성이 중국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북한 시장 개척과 변경 무역 확대에 나서



기로 했다고 길림신문(吉林新聞)이 8일 보도함.

- 지린성은 북한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변경지역에 가공 수출과 국제 물류 기능을 갖춘 변경 합작구를 건설하기로 하는 한편, 북중 합작을 통해 북한의 광산과 천연가스, 산림 자원, 농업 부산물 등 천연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함.
- 지린성 상무부 휘위(霍玉) 부청장은 “지난해 국무원이 승인한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해 북한, 러시아와의 교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 프로젝트는 창춘과 지린, 두만강 일대를 단일 경제 벨트로 개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국의 동북진흥책으로, 국무원은 지난해 11월 이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승인하였음.
- 중국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 활성화를 위해 북한의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획득, 동해항로를 확보했으며 청진항 사용권을 추가로 얻어내고자 북한과 협의 중임.

## ■ 통일부 “대북조치 이후 첫 ‘北영유아지원’ 승인 (6. 9, 연합뉴스)

- 통일부는 9일 천안함 대북조치 이후 처음으로 분유 등 2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랑재단이 함경북도 회령시와 양강도 지역 영유아에게 지원할 분유와 남북평화재단에서 평양시 인근 탁아소 영유아에게 보낼 우유 및 분유의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힘.
- 북측에 지원할 우유와 분유 규모는 국제사랑재단이 1억8천여만원, 남북평화재단이 2억3천여만원 등 4억원 규모이며, 이들 물품은 이달 하순께 북측에 전달될 예정임.
- 이번 대북 지원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천안함 대북조치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임.

## ■ 軍, 대북 확성기 11곳 설치 완료 (6. 9, 연합뉴스)

- 군 당국은 9일 최전방 지역 11곳에 대북 확성기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 군 관계자는 “난 7일부터 시작된 대북 확성기 설치 공사가 이날 완료됐다”면서, “현재 11 곳에 확성기가 설치됐지만 추가로 다른 지역에 더 설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심리전을 위한 대북 확성기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지역을 비롯한 서해 교동도와 김포반도 북단 지역 등인 것으로 전해짐.
- 군 관계자는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언제 시작할지는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 ■ 이대통령, 북한 두려워할 조치 취할 것 (6. 9,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과 관련, “지금은 (북한이) 바른길로 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함.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북한은)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도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해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역시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 통일부 “모든 대북 반·출입 사전 승인대상 (6. 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1일 천안함 대북조치에 따라 남북 간 모든 반입·반출 품목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대상으로 전환했다고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월24일 천안함 대북조치에 따른 남북 교역중단을 실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해 ‘반입·반출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함.

- 남북 간 물품 반입·반출시 기존에 포괄적 승인대상으로 지정됐던 품목도 대부분 개별 승인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임.
- 포괄적 승인대상 품목은 세관에 신고만 하면 반입·반출이 가능하지만, 개별승인 품목으로 지정되면 반입·반출 때마다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 등 북한 지역 체류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생필품), 남북 회담·행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물품 등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괄승인을 인정하기로 함.
- 개성공단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통일부 장관의 별도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함.

#### ■ 탈북자 10명 中단둥서 강제 복송 (6. 13, 연합)

- 중국 단둥(丹東)에서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10명이 지난 3일 오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이 13일 밝힘.
- 이 단체 관계자는 “남한행을 위해 단둥의 안전가옥에 숨어 지내던 탈북자 13명이 지난 달 29일 체포돼 이중 5살과 6살된 어린이 3명은 석방됐으나 성인 10명은 복송됐다”며 “강제 송환된 이들은 50, 60대 남성 2명과 20, 30대 여성 8명”이라고 전함.
- 그는 “남한행을 감행하다가 복송된 탈북자들은 ‘반역자’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함.
- 이 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의 ‘긴급 캠페인 참여하기’ 코너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전화와 팩스 번호를 공개하는 한편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 앞으로 보내는 영문 편지 양식을 게재해 놓고 서명을 받고 있음.

#### ■ 北 김정일, 최고인민회의 1주일 만에 공개 활동 (6. 15, 연합)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참석 후 1주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해 호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 인민보안부 (경찰청 해당)의 군인가족 공연을 관람함.

- 후계체제 구축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매제 장성택(당 행정부장 겸직)을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격 발탁해 사실상 '북한의 2인자'임을 공식화하고, 다시 1주일만에 자신의 경호부대와 양대 공안기관을 챙긴 것임.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5일 김 위원장이 제963군부대(호위사령부 별칭), 제10215군부대(보위부 별칭), 제7501군부대(보안부 소속) 등 8개 군부대의 군인가족들이 참가한 '제2기 3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중앙방송은 이 행사에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우동측 보위부 수석부부장,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 당 비서, 김경희 당 부장, 주규창 당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전함.

## ■ 美, 北 인신매매 최악국 재지정 (6. 15, 연합)

- 미국 국무부는 14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2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함.
-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주민들의 탈북을 촉발시키고 탈북자들은 인신매매의 위협에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가장 흔한 경우로 "인신매매 조직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국경수비대와 공모해 중국에서 결혼이나 매춘을 할 북한 여성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지적하고,
-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북한으로 송환 조치돼 엄한 처벌을 받거나 노동수용소의 강제노역에 동원될 수도 있다"면서 "수용소 강제노역에는 북한 정부당국이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15만-20만명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 유럽의회, 대북결의안 채택 (6. 18, 연합)

- 유럽의회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유럽의회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6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날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함.
- 결의안은 “북한 어뢰가 천안함 침몰을 야기했다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명시함.
- 결의안은 또한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함.
- 결의안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절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남북한 긴장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 유럽의회가 대북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6년 6월 대북 인권 결의안 이후 4년 만에 처음임.

## ■ 정부, 대북 교역업체 긴급 자금지원 검토 (6. 18, 연합)

- 통일부가 천안함 대북조치로 피해를 본 대북 교역 및 경협 업체(위탁가공포함)들을 상대로 긴급 운용자금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통일부는 해당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업체들의 현황과 긴급 자금 수요 규모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긴급 자금지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지원 대상은 일단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대북조치로 대북사업이 전면 중단된 대북 교역업체와 위탁가공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통일부는 또한 대북 위탁가공을 위해 이미 구입해 놓은 원부자재에 대한 실태 파악에도 나서 이들 원부자재에 대한 대북 반출을 허용할지 주목됨.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일단 긴급 운영자금 수요 규모 및 원부자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힘.

## ■ 北-中 ‘총격사건’ 불구 일관된 경협행보 (6. 15, 연합 / 6. 19, 한겨레)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조치들이 지난 4일 압록강에서 북한 경비대가 중국의 밀수업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학성(李學成) 신의주시 책임서기를 비롯한 신의주 대표단은 지난 1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를 방문, 샤더런(夏德仁) 당서기 등 다롄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교류와 합작 확대 등 경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지난주 북한 무역성 부부장 일행이 베이징을 방문해 나선시와 신의주의 황금평을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 위한 ‘공동개발관리 위원회’의 설립에 합의했으며, 북한 무역성 부부장과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전해짐.
- 한편 천웨이진 부성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지린성 정부 대표단은 15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이태남 신임 부총리와 만나, 중국의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유역) 개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김정일 위원장 방중 당시 양국 지도자의 합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또한 북한의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을 단장으로 하는 40여명 규모의 조선노동당 우호사절단도 중국을 방문 중이며, 지난 12일에는 김 위원장이 방중 당시 방문했던 텐진을 방문해 빈하이신구 등을 돌아봤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전함.

## ■ 개성공단통행 ‘1개월 이상 차단시’ 입주기업 지원 (6. 20, 연합)

- 통일부는 개성공단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됐을 경우 입주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힘.

- 개정안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라 다수의 개성공단 현지기업들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차단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또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다수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개정안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방식,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당기간 통행이 차단되거나 사업이 중단기간 중단되는 경우 정부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임.

#### ■ 美, 천안함 관련 대북 금융제재 검토 (6. 20,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독자적으로 대북(對北)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8일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지 다양한 선택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지금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함.
- 한편 북한의 최대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18일 평양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서 천안함 사건이 한국과 미국의 ‘조작’이라면서, “대북 제재에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함.